

새 정부 발맞춰 '전주함께장터' 추진

전주시, 시민·기업·공공기관 주도 지역 상생형 경제공동체 운동 확산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집중

전주시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성장·행복에 발맞춰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전주함께장터' 민생살리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민생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 시민 참여형 민생 살리기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함께장터'는 지난해 말 도입된 26개 기업과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약 7080만 원 규모의 기부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응원



'전주함께장터' 포스터

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동시에 지난 4월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국도정보공사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골목상권 이용 행사를 진

행한다.

지난달에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플라마켓인 '전주 이팝나무장터'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시민 주도형 행사와 다양한 상생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펼쳐지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의 경우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운영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에는 (사)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가 기증한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가 열리고, 오는 25일부터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장 장보기 행사가 매월 정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에는 종교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 활동과 점동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고, 9월에는 '한 가지 맛'이 함께 더 큰 장터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축제가 이어진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산

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주함께장터' 민생살리기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하는 한편, 민·관·산·학·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해 회복과 성장, 행복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함께장터는 단순한 행정 주도의 소비 장려 정책이 아니라 시민,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실천적 연대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 골목상권과 점동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맛매달 소비쿠폰 행사 시행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할인쿠폰 자동 지급

전주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맛매달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공공매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매달업의 높은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외식 소비 촉진으로 침체된 민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전주맛매달'에서 2만 원 이상(음식값과 배달료 합산액) 3회 배달 또는 포장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소비쿠폰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일~19일 주문 건도 소급해 실제로 적용되며, 일별 주문 건수 제한은 없으나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 쿠폰은 매일 1인당 1장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쿠폰은 2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소비쿠폰 행사와 함께 자체 할인 이벤트를 병행하고, 홍보

를 추진하는 등 공공매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맛매달 사용료를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 선착순 500명 대상으로 2000원 주간 할인 혜택과 매일 선착순 1000명 대상 3000원 첫 가입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가맹점과 소비자 신규 확보를 위해 골목상권 드림축제 등 지역 축제 홍보부스에 참여하는 등 전주맛매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전주맛매달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 플랫폼으로, 가맹점에게는 중개수수료 0원과 가입비 0원, 광고비 0원의 '3無 정책'을 시행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전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과 함께 주간 할인, 시즌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원산구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천3동에서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구입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랑이 넘치는 식재료 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삼천3동 지사협, 사랑 넘치는 식재료 꾸러미 나눔

전주시 원산구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종우), 삼천3동(동장 김주관)에서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구입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랑이 넘치는 식재료 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삼천3동 '사랑이 넘치는 식재료 꾸러미 나눔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 등에게 식재료 꾸러미를 확인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수혜자분들께 김치, 돼지고기, 계란, 토마토, 수미감자, 오이, 상추 등 12종의 제철 식재료를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효천점에서 구입하여 꾸러미 형태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4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 등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종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밥상에 주로 올리지는 식재료 위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수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관 삼천3동장은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에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내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사랑을 가득 담은 제철 식재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 확대

전주시, 7~9월 일요일도 개방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야외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운영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쉼터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혹서기인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기존 운영일 외에 일요일에도 쉼터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쉼터 운영시간도 확대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운영되던 전주시역 2개 이동노동자 쉼터는

혹서기 동안에는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덕진구 송전동 농산물도매시장 등 2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쉼터에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방장 보관된 시원한 생수가 비치돼 무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잠시 몸을 식히며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시는 운영질환 예방을 위해 혹서기 동안 충분한 양의 생수를 추가 확보·비치하고, 냉방 장비 관리와 실내 환경 위생 점검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가동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채영병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산불방지 조례'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채영병의원(효자 2·3·4동)이 대표로 발의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 실행 계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 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

여형 산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